

환급법 밖 의심계좌는 강화된 고객확인으로 먼저 멈췄습니다

FIU 지침에 따른 6,914건의 임시조치와 5,018건의 거래정지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구분합니다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의 2026년 9월 2일 발표와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체계를 대조했습니다.

발행	2026.09.26	연번	2026_101
읽는 시간	7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자료 기준일	2026.09.26	검증	공식 원문·현행 법령 대조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이번 조치를 환급법의 공백을 자금세탁방지법상 강화된 고객확인으로 임시 보완한 것으로 봅니다. 의심계좌를 신속히 멈춘 성과와 고객 재산을 제한하는 절차적 통제는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이의제기, 해제기한과 오탐 통계를 명시하는 후속 입법이 필요합니다.

CONTENTS

이 글의 순서

- 01 연구소의 판단
- 02 확정된 사실
- 03 왜 이런 구조인가
- 04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 05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 06 지금 할 일
- 07 갈림길
- 08 함께 읽을 것
- 09 근거와 검증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회사는 2026년 6월 30일부터 8월 21일까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 범위 밖에 있던 의심계좌에 6,914건의 임시조치를 했고, 그중 5,018건을 사기이용계좌로 분류해 거래를 정지했습니다. 이 조치는 추가 입금과 자금 확산을 막는 예방조치이지 피해금 반환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에 강화된 고객확인을 활용한 의심계좌 임시조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운영기간	2026.6.30~8.21	시범 운영
임시조치	6,914건	출금·이체 제한 등
거래정지	5,018건	사기이용계좌 분류
2025.10~2026.7 발생	1만2,554건	전년 동기 대비 39.9% 감소
같은 기간 피해액	6,324억원	전년 동기 대비 43.2% 감소
환급 확정	별도 절차	거래정지와 구분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이상거래로 탐지된 계좌에 우선 임시조치를 하고, 고객확인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판단된 5,018건의 거래를 정지했습니다.

발표문은 조치 계좌의 추가 피해 방지와 범죄자금 확산 차단을 성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정지 금액, 피해자별 환급액, 오탐·해제 건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는 피해신고와 사기이용계좌 인정, 채권소멸·환급으로 이어지는 법정 절차입니다.

이번 조치는 특정금융정보법의 강화된 고객확인을 근거로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등을 추가 확인하고, 확인이 되지 않거나 사기 위험이 높으면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거래정지는 돈이 더 들어오거나 빠져나가는 것을 막지만 피해자의 권리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지 뒤 환급법 적용, 수사, 민사상 반환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은 의심계좌 명의자, 이미 돈을 보낸 피해자, 추가 입금을 시도하는 사람과 해당 계좌를 취급한 금융회사입니다.

정상 거래가 멈춘 고객에게는 사유 통지, 소명자료, 심사기한과 해제 절차가 실질적인 보호장치입니다.

거래정지 비율	5,018 ÷ 6,914 72.6%	임시조치 중
사건 감소율	39.9%	전년 동기 대비
피해액 감소율	43.2%	전년 동기 대비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 정지한 금액과 환급액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계좌 건수만으로 실제 피해 예방 규모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02 · 오탐과 해제 통계가 없습니다

정상 계좌가 얼마나 멈췄고 며칠 만에 풀렸는지 확인해야 비례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03 · 이의제기 절차가 법률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법적 근거와 이의절차 마련을 예고했습니다.

04 · 임시조치와 환급의 연결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지 이후 피해신고·수사·채권소멸 절차로 넘어간 비율이 필요합니다.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

국민	- 사기 의심 송금은 즉시 112와 금융회사에 신고합니다. - 거래가 제한되면 금융회사에 사유·필요서류·심사기한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거래정지가 곧 환급이라는 설명을 믿지 않고 환급 절차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대상회사	- 임시조치의 위험신호, 승인권자, 해제기한과 고객 통지를 기록합니다. - 오탐·해제·환급 연결 결과를 정기적으로 검증합니다.
당국	- 법률상 조치요건·최대기간·이의제기·손실구제 절차를 명시합니다. - 정지 금액, 오탐률, 평균 해제기간과 환급 연결률을 공개합니다.

칼럼길

임시지침이 신속한 차단과 절차적 권리를 함께 제도화하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시범운영 통계에는 금액·오탐·해제기간이 없습니다.

A 법률상 통제 마련 조치 요건과 이의제기가 명확해져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B 건수 중심 운영 지속 정상 계좌 제한과 피해 회복 성과를 함께 평가하 기 어렵습니다.
---	---

어디를 보면 아는가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FIU 지침과 금융회사 이의제기·해제 통계를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

2개의 연결 지식

[넥서스 리서치](#) 보이스피싱 은행 뭇은 자율 기준이 정한다 ↗

[금융사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3건

01	1차 · 6,914건 임시조치·5,018건 거래정지와 피해 추이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보이스피싱 근절 성과 및 향후 계획, 2026.9.2 · 확인 2026-09-26 원문 열기 ↗
02	1차 · 강화된 고객확인인 법률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확인 2026-09-26 원문 열기 ↗
03	파생 · 임시조치 중 거래정지 비율 계산: 5,018 ÷ 6,914 · 확인 2026-09-26

추적 예정	강화된 고객확인 기반 거래정지의 법적 근거, 이의제기 절차, 정지금액·오탐률·해제기간을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첨부분의 조치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와 구분하고, 거래정지가 환급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공개된 정책자료와 법령을 분석한 것이며 개별 계좌의 거래정지·환급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